

사업결과보고서

1. 사업 배경

□ 개요

- 사업명: 북한의 사회문화적 변화 연구자 인큐베이팅 사업
- 기관명: 사회과학연구원
- 연구기간: 2019년 4월 - 2020년 2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서울대학교 내에는 자신의 연구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화와 통일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자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량을 북한 사회와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연구하는 데 활용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통일학과 평화학 분야의 저변확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본 사업은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학문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통일과 평화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러 학문분야에서 연관된 주제나 유사한 상황을 가진 타지역의 사례를 다루어온 교내 연구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교내 연구자들의 북한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학내외 통일과 평화와 관련한 연구의 양적,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목적

- 위와 같은 배경에서 추진된 본 연구 사업은 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변화를 면밀하게 탐색할 수 있는 연구자를 육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서울대학교 내 통일과 평화 연구자의 저변확대를 추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사회문화에 관한

연구역량을 확충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개별 연구자가 학제간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개별 학문분야로 흩어져있던 연구역량이 북한의 사회문화의 탐구를 위해 모일 수 있도록 시도할 것임

- 2018년 4분기에 진행한 예비사업과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된 본 사업은 개별 연구자가 당시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기초하여 2019년에 실제 연구를 진행, 2020년 상반기까지 북한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대한 개별 논문을 작성 및 게재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됨
- 이러한 목표를 실행한 이후 본 사업의 개별 연구자가 학제간(interdisciplinary)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개별 학문분야로 흩어져 있던 연구역량이 북한의 사회문화의 탐구를 위해 모일 수 있도록 시도할 것임.
- 향후 이러한 연구사업 모델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다른 연구주제를 포괄하여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국제적인 공동연구로도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사업 내용

□ 사업 추진 내용

- 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공동연구의 단계적 추진
 - 본 연구 사업은 2018년 4분기에 예비적 단계로 사회문화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바 있고 북한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서울대학교 내의 우수한 연구자를 모집하여 진행되었음. 이때 선정된 연구자들이 해당기간에 북한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연계된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2019년 2월 사업결과보고와 함께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이러한 예비사업과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된 2019년도 사업은 개별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기초하여 실제연구를 진행해왔음. 2019년 11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에서 개별연구 진행상황을 발표했으며, 이를 발전시켜 2020년 상반기 중 학술지 또는 저서에 논문을 게재할 예정임(일부는 이미 게재).

□ 일정별 추진 사항

단 계	일 정	추진 내용
1단계 예비사업	2018.9.	연구진 회의, 주제 선정 및 논의
	2019.1.	연구자별로 연구계획서 작성완료
2단계 본사업	2019.4.	연구진 회의
	2019.6.	중간 점검 회의
	2019.10.	중간 점검 회의
	2019.11.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발표
	2020. 2.	논문 보완 및 완성 회의
	2020년 상반기	학술논문을 완성해 학술지/저서에 게재
3단계 후속사업	2021~2022년	사회문화에 특화된 연구주제로 소규모 팀을 구성하여 개별/공동으로 연구프로젝트 추진

3. 사업 성과

□ 연구결과물

- 이 연구는 2018년 예비사업을 통해 참여연구진에게 단기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뒤, 2019년도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하여 학술성과물(발표문, 논문, 저서)을 내도록 하도록 기획되었음
- 총 8명의 참여연구진은 2019년 11월 27일(수)에 열린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에서 각자의 연구 진행상황을 발표했으며, 2020년 상반기에 학술지 혹은 저서에 논문을 게재할 예정임(일부 연구진 게재 완료)

□ 공동연구원의 개별 연구주제 (가나다 순)

- 본 연구 사업에 참여한 개별 연구자의 연구주제는 아래와 같음.

연구자	연구주제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남조선 동포’는 ‘조선 인민’인가? 분단 이후 북한의 민족주의의 변화와 전개
김재석 (인류학과)	탈사회주의적 변화에 있어 민간(民間)의 역동성과 선행성(先行性)
이강재 (중어중문학과)	북한의 외국학 전문가 양성 협력방안
이찬수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의 민간신앙: 남북 종교문화적 심층의 상통성 연구
이철희 (경제학부)	남북한 인구변화와 노동인력규모 전망: 남북경제교류확대의 효과에 대한 함의
정공식 (법학과)	해방 후 북한에서 식민지법제의 청산과 체제 관련 법제 정비: 1945.8.~1948.9.
정향진 (인류학과)	북한 조직생활 의례와 사회적 장의 정치화
채수홍 (인류학과)	베트남 개혁개방정책과 노동시장이 북한사회에 주는 교훈

□ 공동연구원의 개별 결과보고 (자유양식)

1.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남조선 동포’는 ‘조선 인민’인가? 분단 이후 북한의 민족주의의 변화와 전개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1948년 남북한 분단 이후 북한 사회 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구성하는 “조선 인민”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특히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남한동포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조선 인민”으로, 즉 국민정체성을 공유하는 “우리(we)”의 일원으로 인식했는지 아니면 이들을 “조선 인민”의 범주에서 배제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북한의 공식 국가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자신들이 “조선인민”의 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1조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제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인민”의 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근로인민”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주권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 그렇다면 분단 이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구성하는 “조선인민,” 즉 북한 “공민”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배제되는가? 북한의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또한 “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이거나 또는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연변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는 재외동포 또한 공화국 공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북한 사회 내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구성하는 ”조선인민,“ 즉 ”공화국 공민“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해 왔는지, 특히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이 범주에 포함했는지 아니면 배제했는지 살펴본다.

○ 연구성과

- 2019년 11월 27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통일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
- 2020년 “New Nationalisms in an Open World”를 주제로 7월 25-29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세계정치학회(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주최 제26회 월드콩그레스(World Congress)의 비교정치 분야 “Nationalism, Identity and Symbols in Democratic and Non-democratic Regime” 패널에서 논문 발표 예정. 학술회의에서 발표할 논문의 영어 요약은 다음과 같음.

Are South Korean Compatriots “Chosŏn Inmin”?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Ethnic Nationalis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question of whether North Koreans’ notion of “the people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hosŏn inmin)” included South Korean compatriots or not,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ethnic nationalism in North Korea. As well known, the Korean nation, who had “imagined” to share a common bloodline,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for more than thousands of years, was divided into two state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South Korea) government on August 15, 1948, and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 on September 9, 1948. Then, after the division of Korea, how was North Koreans’ notion of “we, the people of the DPRK (uri chosŏn inmin)” who “imagined” to share a common national identity? Who was included into, and was excluded from, “we, the people of the DPRK”? Especially, did North Koreans’ notion of “we, the people of the

DPRK” include South Korean compatriots (namchosŏn tongp’o), or exclude them? Focusing on these ques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trifurcation of ethnic nationalism in North Korea. Specifically, by analyzing editorials of Rodong Sinmun, the official newspape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is study reveals that, following the division of Korea (1948), ethnic nationalism trifurcated in North Korea into three different but closely related versions, each of which did not deny that historically all Koreans belonged to the same nation, but defined “chosŏn inmin” differently: 1) tanilminjok (one nation) nationalism which included not only North Koreans but also South Korean compatriots into “chosŏn inmin,” 2) socialist nationalism which included North Koreans and “minjung (revolutionary people)” of South Korea into “chosŏn inmin” while excluding South Korean “stooges of American imperialism,” and 3) the DPRK nationalism which included North Koreans only into “chosŏn inmin.” Seen from a Gellner's perspective, this means that North Koreans tried to make the "national" boundaries congruent with the political ones of the DPRK by imagining themselves as a different national community, separated from South Korean compatriots.

Keywords: Ethnic Nationalism, North Korea, South Korean compatriots, inclusion, and exclusion

○ 출판계획

- 본 논문은 영어로 작성 중인 관계로 2020년 출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 이 분야 SSCI급 저널의 일반적인 출판 스케줄(최초 투고에서 최종 논문 출판까지 약 2년 정도 소요)을 고려할 경우 최종 출판은 2022년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2. 김재석 (서울대 인류학과)

탈사회주의적 변화에 있어 민간(民間)의 역동성과 선행성(先行性):

북한 장마당과 중국 가구생산책임제의 형성과정 비교와 전망

본 연구는 중국과 북한의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에서 민간(民間)이 담당하는 선행(先行)적 역할과 이 역할이 형성되고 지속되어 온 역사적·사회문화적 배경을 조명하고, 민간과 국가기구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는 1980년대 중반 덩샤오핑으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지도력에 의해 추동되었다고 이해되며, 북한의 변화 역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이끄는 강력한 중앙권력에 의해 지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권력의 정치적 결단에 중점을 두어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를 설명하는 접근법의 유효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북한에서 공식적인 포스트사회주의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이전 시기에 민간의 영역에서 이와 유사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는지를 분석한다. 연구자가 가정한 ‘선(先) 민간, 후(後) 정부’ 모형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의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비공식 차원에서 비(非)사회주의적 관행을 만들어 내고, 이것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자 정부가 해당 관행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는 레이저우만과 신의주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가 어떤 불가역적인 단선적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으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데 민간이 취한 역할을 조명하였다. 현대 중국은 전통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그리고 1980년대의 개혁·개방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자본주의사회로 변화하는 일련의 불가역적 과정을 거쳐왔다기보다, 전통적 요소가 사회주의적 요소와 혼재하며 이러한 혼재의 상태가 보다 최근에 나타난 자본주의적 변화와 뒤섞이게 되는 혼종의 상태가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혼종의 상태는 본 논문의 주요 분석 대상인 ‘민간’에서 잘 드러난다. 민간은 중국어 단어인 민젠(民間)의 한국어 표기이며, 그 구체적인 뜻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백성(民)과 관리(官)의 이분법적 구분으로부터 유래한다. 사회주의 시기 중국 정부와 당은 이 역사적 이분법을 답습하여, 민간을 사회주의 체제 외부(体制外)에 있는 모든 것과 연관시켰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의 민간은 행정체제와 사회주의 노동조직을 결합한 단위(单位)와 연결되지 않은 개인, 집단, 그리고 이들이 행하는 행위를 포괄하였다. 민간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국가가 이들의 행위나 존재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수입을 받지 않았고, 이들이 지닌 주변적·퇴행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주의의 고도화에 따라 소멸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민간 영역의 궁극적 소멸이라는 전망과 달리 본 연구가 주목하는 민간의 역동성은 사회주의 이전 시기로부터 사회주의 시기를 거쳐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가 나타나는 현 중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으며, 북한 신의주 지역에서도 그 정도와 범위를 달리하여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과 국가권력 관계의 역사적 변천과 이 변화과정에서 민간이 행한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연구자는 북한보다 먼저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가 나타난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한다. 북한 정부가 자국의 변화를 고려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주요하게 참고하고 의지하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과 북한의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는 중국의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에 대한 실제적 분석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중국 광둥성의 레이저우만(雷州灣) 지역과 북한의 평안북도 신의주 일대를 조사하였다. 이 두 지역을 선정한 것은, 변경 혹은 국경지대의 민간이 국경무역 등 교역행위에 기반한 강한 행위성(agency)을 지니며, 이러한 변경적 행위성이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를 선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광둥성 레이저우만 일대는 중앙 정치권력에서 멀리 떨어진 국경 해안지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해외무역의 주요 관문으로 기능해 왔으며, 함경북도 신의주 일대 역시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압록강 하구를 통한 대중(對中) 국경무역의 핵심 지역으로 기능해 왔다. 연구자는 국경지대의 정치적 변경성과 대외무역 등 교역행위에 바탕한 경제적 역동성에 주목하고, 조사지역의 민간 행위자들이 시장참여를 둘러싸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합법의 규정자인 국가권력과 긴장과 대립, 협력과 공모의 관계를 맺는 과정을 분석한다.

중요한 것은 국경지대에 존재하는 탈법의 영역이 반드시 정치권력의 이해(利害)에 반(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앙 정치권력은 국가의 일상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 등 필요에 따라 변경지역 민간이 지닌 강한 상업적 역동성을 용인하거나 심지어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용인 혹은 공모의 관계는 합법과 불법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비법(非法)의 영역을 가능하게 하였다. 연구자는 중국 내전과 한국전쟁 시기 기존의 상업망과 물자수급망이 붕괴하였을 때 중국 중앙정부가 레이저우만 민간의 밀수나 상행위와 같은 비(非)사회주의적 행위를 장려한 사실을 분석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 지역 민간의 역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어

연구자는 북한의 신의주 지역 민간이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에도 비공식적 국경무역과 상업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대중 관계의 호전이나 ‘고난의 행군’ 시기 배급제가 붕괴하면서 촉발된 장마당의 활성화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데 주목하고, 이 현상이 중국의 경우와 유사한 민간 영역의 재(再)활성화를 반영하는가의 여부를 비교분석을 통해 조명하였다.

연구자는 중국과 북한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광둥성의 레이저우만 일대에서 역사적·민족지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지역의 변경성이 해외무역과 지역상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청 말 시기까지 소급하는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과정에서 ‘선 민간 후 정부’의 유형이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부 문헌에 대한 조사와 함께 당시의 변화를 실제로 경험한 민간의 행위자들을 면담하였다. 중국에서의 현지조사 초기에 연구자는 개인적 친분을 통한 소개로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세 명의 주민들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몇 차례의 만남을 통해 이들과 친밀한 관계(rapport)를 형성한 후에, 이들의 소개를 받아 다른 주민들과 추가적인 면담을 행하는 스노우볼 방식(snowball sampling)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였다. 비교분석을 위한 북한 연구에서는 민족지적 현지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들이 제공하는 북한 주민들과의 면담 자료를 활용한 문헌조사를 행하였으며, 북한 이탈주민 중 신의주 지역에 거주하였던 주민들과의 면담도 진행하였다. 직접 면담의 경우, 이들의 신분보장과 이해침해 방지를 위해 연구대상자들의 신분을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연구활동 및 성과

1. 학술지 논문 게재

김재석. 2019.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에서의 민간(民間)의 역동성과 선행성(先行性): 중국 레이저우만과 북한 신의주 지역 비교연구,” 『통일과 평화』 11(2): 217-268.

2. 학술대회 발표

a) The 11th 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 Scholars (ICAS), 2019년 7월 17일.

2019년 7월 16일~19일 (Netherlands, Leiden University)

세션: Korean Peninsula on the Move

(co-organizers: Korea Foundation,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The Hidden Agency of *Minjian*: The Key Role of the Grassroots in Implementing China’s Reform and Openness and its Implications to North Korea’s Post-socialist Transformation.”

b)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2019년 11월 26일~27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호암교수회관

세션13: 북한사회문화

“주변성(marginality)과 탈사회주의적 변화: 중국 광둥성과 북한 신의주의 사례 비교”

3. 이강재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북한의 외국학 전문가 양성 협력방안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북미 및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평화체제가 정착되어갈 경우, 북한의 대외 개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 중 하나로 준비되었다. 북한이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자본, 인력,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중에서 북한의 대외개방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인력 자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인력이나 자본 측면에서 해외 화교네트워크의 도움에 크게 의존했듯이, 북한은 대외개방 전문 인력 양성에서 남한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우리는 중국과 베트남의 과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북한은 대외개방과 경제발전에서, 중국과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의 해외 사례를 적극 검토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치적으로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사례로 주목되는데, 중국과 베트남 모두 대외개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부문이나 민간 부문에서 대외관계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우리가 시도하는 북한의 외국학 전문가 양성 협력방안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는 곧 본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어내려는 목적이기도 하다. (1) 북한의 대외개방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확보, (2) 남북협력의 새로운 실용적 모델 제시, (3) 남북 협력사업의 핵심 인프라 확립, (4) 북한의 교육시스템 현황 파악, (5) 북한 변화의 경로의존성을 확립. 또한 본 연구가 참조한 기존의 연구는 (1) 북한 고등교육의 역사와 현황에 관한 연구, (2) 제3국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과 외국학 육성 경험에 관한 연구, (3) 학술·교육 영역의 남북 협력사업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부분을 다루었다. (1) 북한의 외국학 전문가 양성 현황, (2)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 검토, (3) 북한의 외국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협력방안.

이 중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외국학 전문가 양성 협력의 구체적 방안”은 다음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는 교류의 본격화를 대비한 기반 조성의 단계이며, 2단계는 남북한 협력 운영기구 등을 설립하는 등 협력 본격화 단계이며, 3단계는 남북의 자유왕래가 가능한 단계이다.

먼저 1단계는 교류 본격화 대비한 기반 조성 및 신뢰 구축 시기이다. 남북한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소통 가능한 언어(구어, 서면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교류 협력에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은 최대한 피하고 실용에 초점을 둔 교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기 단계는 문헌이나 서적 등의 교류에서 출발하고 몇 가지 측면의 인적교류를 포함할 수 있다. 북한의 교수진, 행정가,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견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그동안 우리가 축적해온 외국어 교육의 노하우 전수하거나 혹은 국내에 다양하게 진행 중인 전문가 양성과정에 북학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2단계는 협력 운영기구 설립의 시기이다.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외국학이 매우 중요했던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개방 이후 북한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문에 외국 학습 노하우가 뛰

어날 우리의 장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크다. 2단계에서는 이를 위해 남북 공동의 교육과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구화, 제도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가령, 개성공단은 단순히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하기 위한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향후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술집약적 공장 이전도 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향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동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내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이곳에서 남북한은 외국학 전문가 양성을 비롯한 중요한 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단계는 자유 왕래의 시기이다. 북한 학생들이 대규모로 우리나라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서 나아가 우리 학생들과 동등하게 장학금 등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국학 전문가 양성에서 북한에 큰 도움을 주고 협력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가 되면 이미 양성된 남북의 외국학 전문가 사이에서 학술적, 실무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외국학 분야의 협력에서 촉발된 각 분야의 남북협력 또한 가시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왔으며 여기에 인문학적 창의적 상상력을 가미한 방안의 제시를 해나가고 있다. 향후 보다 면밀하고 광범위한 문헌 자료의 검토를 통해 세부 내용에 대한 치밀한 보충이 필요함은 물론, 당초 연구의 방법에서 여러 제약요인 때문에 배제하였던 현지조사나 체험자 인터뷰 등을 최종 단계에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현지조사는 장기적으로 볼 때 연구의 완성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여러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선 현지조사를 우회할 수 있는 체험자 인터뷰 등의 검토를 통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산하의 통일연구원, 서울대학교의 통일평화연구 등의 기관을 통해 북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여기에 더하여 인터넷이나 현지 지인을 통해 입수한 중국 및 베트남 관련 자료 분석이 보충되어야 한다. 또 중국의 베이징대학이나 연변지역의 조선반도연구원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추진하고 국내외 거주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 등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현재까지의 단계는, 문제제기 및 관련 문헌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인문학자의 상상력을 동원한 제안 수준까지 이르렀다. 다만 향후 좀 더 깊은 문헌 분석과 체험자 인터뷰, 현지조사 등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더욱 좋은 논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2019년 11월 27일(수)에 열린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에서 <북한의 외국학 전문가 양성 협력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당시까지 진행한 연구진행상황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2020년 중 최종 연구결과를 완성하고 이를 관련 학술지에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4.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의 민간신앙: 남북 종교문화적 심층의 상통성

1. 연구의 배경, 관점, 방법

남북관계는 적대적 준국가관계에 있으면서 역사의 공유, 민족적 동질성에 기반해 통일을 지향하는 양면 관계에 있다. 서로를 별개의 적대적 국가처럼 간주해야 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사회적 갈등도 있지만, 동시에 민족적 동질성에 기반한 공존과 통일 지향의 정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중 상황 속에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세월 같은 민족성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생애적인 동질감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는 중요하다. 분단 70년 역사에 비할 수 없이 오랜 세월을 같은 곳에서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며 공존해온 것이 한반도 구성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문화 및 정서적 공감대의 확보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고자 하는 이들의 기초적인 연구 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작업 중 하나로서 북한 종교문화의 심층, 특히 민간신앙에 대해 살펴 보았다. 민간신앙은 민중의 기층적 정서를 확인시켜주는 일차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고려 이후만 쳐도 천년 이상 함께 살아오면서 형성된 한반도 구성원의 기층적 정서는 분단 70년 만에 쉽사리 사라지는 표층적 습관이 아니다.

이를 위해 탈북민 5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재 북한 주민의 민간신앙의 양상을 살펴 보았다. 이모가 북한에서 80년대까지 무당이었고, 본인도 신기(神氣)가 있는 탈북자 1인, 탈북 후 중국을 거쳐 한국에서 목사가 된 여성 1인, 중국을 거치지 않고 남한으로 직행한 탈북민 1인, 재일동포로 살다가 이른바 ‘귀국자’로 입북한 뒤 30여년 후 일본으로 재탈출한 사람 2인 등 모두 다섯 사람과의 심층 대화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의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고, 점술, 예언, 치병, 구복 등 북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신앙의 수준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민간신앙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북한의 종교(제도종교) 억압 정책에 불구하고, 기복적 기도, 점보기 등 오랜 기층적 종교문화와 관습은 사실상 여전했고, 남측과 과히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공연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종교 존재 양상의 변화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의 창건 이후, 특히 김일성에 의한 유일 지배가 본격화된 이후, 북한은 기성 종교를 강력히 규제하고 종교 행위를 처벌했다. 그 결과 1960년대에 이미 불교니 기독교니 하는 제도로서의 종교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거의 사라졌다. ‘종교’에 해당하는 ‘교’라는 말을 그것도 사석에서 사용하는 정도로 변했다. 그 결과 1980년대 즈음에 이르면, ‘예배’와 같은 공식적인 종교 의례는 물론 ‘신앙’, ‘하느님’, ‘하나님’과 같은 말도 거의 사라졌거나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 설령 알더라도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언어인 데다가, 공개적으로

사용되어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 그에 대한 개념도 아주 막연해졌다. ‘신부’나 ‘목사’라는 말을 모르거나, 들어봤더라도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목사’와 ‘스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종교적 경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가령 ‘신’이라는 말이 금기시되고는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여전히 사용된다. 가령 꿈이 현실과 맞을 경우 ‘신이 꿈을 통해 암시해 주었다’는 식의 말을 하곤 한다. 물론 깊은 종교적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정도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언어가 전승된다는 것은 기복적 기대와 같은 희망의 영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도 심층적 차원에서 종교성이 전승되고 발현되기도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여성 탈북자(53세)에 의하면, ‘자신의 이모가 무당이였으며 80년대까지도 간소한 형태로 신당과 같은 것을 차려놓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기도 했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가 새벽에 물을 떠놓고 무언가 비는 모습도 종종 보았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딸(탈북자)이 ‘살이 세다’면서 딸에게 ‘붉은 수수로 팥단지를 만들어서 집 네 모퉁이에 두는 방토(일종의 액막이)를 하곤 했다’고 한다. 그 탈북자 자신도 탈북 과정에 불안감이 엄습해오면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했고, 북에 있을 때도 ‘누군가를 보면 그의 미래가 보이곤 해서 말을 해주면 용하게 맞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그도 ‘신’을 찾기도 하고 ‘하늘’을 찾기도 했는데, 신이나 하늘의 개념은 막연했다고 한다.

중요한 사실은 그 개념이 얼마나 구체적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신을 찾는 행위 안에는 현실 너머 혹은 근원에 대한 해석적 상상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신이라는 언어를 통해 현실의 너머 혹은 현실의 근원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사회적 해석도 전승되는 것이다. 모든 체험은 ‘해석적’이기 마련이며, 그런 언어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종교적 경험에 대한 자신도 모르는 해석인 것이다.

가령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도, 그에게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라기보다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능력이 본래부터 주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탈북자에 의하면, “절박한 순간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늘을 찾았던 본능이 선교사를 만나고 난 뒤에는 두 손을 모으고 개신교식 예배와 기도를 올리는 행위로 대체되며 ‘어렴풋했던 하늘’이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바뀌지만, 그 근본 바탕에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절대적인 소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증언한다.

탈북 후 한국에서 목사가 된 여성(50세)에 의하면, 북한에서 큰 의미 없이 쓰던 ‘신’과 그 역할이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해석한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북한에서 깊은 생각 없이 사용되던 ‘신’이라는 말의 종교 사회적 역할이 과히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래적 종교성이 기독교와 같은 제도 종교의 섬세한 언어로 표현되고 강화되는 것이지, 제도 종교가 인간의 종교성 자체를 형성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본래적 종교성은 지속적인 종교 억압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로 지속되어오고 있다는 뜻이다.

가령 많은 탈북자들이 탈북 과정이 워낙 힘들고 불안하니 거의 본능적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상황이 아무리 위중해도 인간의 종교성 자체는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황이 위중할수록 외적 요구에 따라 습관화된 언어보다는 본능에 가까운 언어가 떠오르고 튀어나온다. 가령 아무리 주체사상이 강력하고 신격화한 수령유일주의가 문화화해 있어도, ‘정작 급해지니 김일성 수령님을 찾거나 김일성을 향해 기도하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다. 김일성 중심 사회 체제를 떠나는 상황이기도 해서이지만, 위기상황일수록 습관적으로 주입된 종교가 아닌 태

생적으로 주어진 종교성이 발현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병실에 ‘4’호실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등 ‘죽을 사(死)’자를 연상하는 숫자를 기피하는 현상과 같은 것도, 그것이 옳으나 그르냐와 관계없이, 향후 남과 북이 교류할 때 낯설지 않게 대화할 수 있는 전통적 소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미신’의 상황과 종교적 정치

이런 맥락에서 거의 본능적 수준에 가까운 민간신앙 분야는 제도종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잔존해 왔다. 북한에서 ‘미신’이라고 부르는 민간신앙도 억압의 대상이기는 했지만, 형벌상의 처벌 대상이라기보다는 강력한 계몽의 대상에 가까웠다. 공식적으로 돈만 오가지 않으면 처벌까지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은밀한 정도로는 전승되어왔다.

민간신앙의 영역 가운데 조상 제사 분위기는 좀 더 분명하다. 돌아가신 분의 기일과 생일에 상차림을 한다. 조상을 잘 받들어야 복이 온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53세 탈북 여성은 이렇게 증언한다: “북에서도 조상제사를 하고, 기일과 생일에 차례를 지내요. 남한과 같어요. 상차림 하고 절하고 산소도 가고요. 조상을 잘 받드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같고, 그래야 복이 온다고들 해요. 이것도 남한과 같아요. 그래서 산소 묘자리를 잘 찾아보기도 하고요. 한식에는 봄에 산소에 멜레(별초)하러 가구요. 대부분의 집안이 그렇게 해요. 추석에 음식해서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먹기도 하고 했지요.”

마찬가지로, 신령, 영혼, 하느님과 같은 언어들도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적어도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용왕님, 터줏대감, 삼신할머니, 성황당과 같은 언어는 크게 의미화하지 않은 정도로 잔존하고 있다. 지옥, 천당과 같은 언어는 없지만, 황천길, 저승길 정도의 언어는 큰 의미 없이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북한에서도 오랜 민간신앙적 세계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종교성 자체는 어떤 상황에서든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를 유지시키는 근간이 되기도 한다. 가령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는 오랜 유교적 가족중심적 문화를 척결하고자 했지만, 탈냉전기 이후 북한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를 담는다’는 취지 하에 오히려 유교적 가족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유교적 가족주의를 주체사상에 입각해 재해석함으로써 유교적 규범과 전통적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질서와 전통적 효문화를 최고지도자와 인민의 관계에 적용해 최고지도자를 ‘아버이’로, 당을 ‘어머니’로 의인화하고, 충효에 입각한 전통 질서를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유기체적 가족국가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사례이다. 이런 관점에서 ‘탈북 행위는 부모가 가난해졌다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것과 같은 배은망덕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유교적 정서를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왕조는 타도해야 할 봉건국가였지만, 유교 이념과 문화는 여전히 북한 사회의 심층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이러한 정책이 옳으나 그르냐는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다. 사회주의 초기에는 배격하려고 했던 유교를 결국 정치에 다시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랜 문화적 정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유기체론적 가족국가관에 따라 전 국민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으려는 시도는,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지만, 그 정치적 행위 속에는 의도하지 않은 종교성이 들어있는 것이다. 아무리 탈종교적 정치라고 해도 오랜 종교적 전승을 활용해야 정치가 돌아가는 일종의 ‘종교적 정치’가 북한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주체사상은 물론 80년부 후반부터 일정 부분 복원하고 있는 제도종교들은 일종의 ‘정치적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 정치’와 ‘정치적 종교’가 북한 특유의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정치’와 ‘종교’의 심층에서는 민간신앙이 여전히 북한 주민의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4. 점보기의 성행과 진정한 자발성

무엇보다 점보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령 1994년 김일성 사후, 그리고 1995~7년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미신시하던 각종 오랜 풍습이 다시 성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신격화한 김일성의 사후 그동안 억압되었던 민간신앙 혹은 토속신앙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다. 청소년에까지 부적, 점치기, 주패(화투나 트럼프)를 통한 신수 보기 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이 등장하면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장사를 앞두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점부터 쳐본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한다. 탈북과 같은 ‘거사’를 앞둔 경우라면 점의 중요도와 빈도수는 훨씬 커진다. 거사를 감행할 날짜, 방향, 상황 등을 묻기도 한다. ‘직업적’ 점쟁이는 없고 ‘복채’와 같은 고유 용어도 없지만, 용하다고 소문난 이들은 동네마다 한두 명씩 있다. 전국적으로 수백 명은 될 것이라는 탈북자의 추측도 나온다. 결혼, 장사 등 크고 작은 일들에 앞서서 점쟁이와 먼저 상의하고 결정하는 일이 흔하다. 손금, 관상, 사주 등을 주로 보는데, 여기에는 보위부원도 예외가 아니다. 보위부도 이 사실을 알지만, 자신들도 점을 볼 뿐만 아니라, 점쟁이의 영험함으로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올까 봐 점술 행위를 슬쩍 눈감아준다. 주술적 정서가 제도적 관례보다 더 크게 작동하면서 드러내놓고 공론화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일들은 그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경제적 난국, 삶의 위기상황에 이르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점술, 사주, 팔자, 조상 숭배 등 및 그동안 ‘미신’처럼 여겨지던 것이 재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전부터 은밀하게 전승되어오던 기층적 생활문화가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당국에서 ‘미신행위 풍습 근절을 위한 비판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것은 강제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종교성 자체는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경제적 난국에서 헛된 ‘미신’이 발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억압과 관계없이, 정치적 억압으로도 막을 수 없는 민중의 원천적 종교성 혹은 심층적 차원을 잘 보여준다. 이를 통해 북한의 일방적 통제 시스템이 느슨해져가고 있는 증거로 삼을 수도 있겠고, 한반도 구성원들이 견지했던 오랜 종교적 정서는 정치적 억압만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는 증거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남북한 민중의 기층적 정서가 이질적이기보다는 유사성 내지 동질성의 측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민간신앙의 발흥 현상에서 북한 주민의 진정한 ‘자발성’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통제된 사회일수록 주민이 통제 속으로 들어가면서 통제의 주체인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순환 과정이 지속되지만, 비판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민간신앙이 발흥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형식이든 북한 주민의 자발적 선택이다. 이러한 자발적 선택은 결국 인간에 대한 완전한 통제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기층적 종교성은 더욱 그렇다. 그리고 북한 사회가 오랜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은 남측의 기층적 정서와 다르지 않다. 결

국 체제와 제도의 통일도 사람의 문제이며, 그 핵심은 분단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정서에 대한 깊은 교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5. 북한의 무속과 남북의 기층적 동일성

그 사례의 하나가 북한의 샤머니즘이다. 해방 이전 자료들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는 현재의 남한에서처럼 강신무가 두루 있었고, 지역에 따라 아이의 신을 모시는 태주무(평북), 경문을 읽어 귀신을 쫓아내는 판수(황해도)는 물론 지역에 따라 여러 종류의 굿이 있었다. 그러다가 무속을 전형적인 흑세무민의 미신으로 간주하면서 예전의 굿이나 무속 의례의 원형은 거의 사라졌다. 오늘날 북한에서 굿을 옛 절차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는 없다. ‘무당’이라는 언어도 거의 사라졌고, ‘점쟁이’와 사실상 동일시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몰래 하는 정도의 약식 굿(광의의 무속 의례)은 은근히 진행되고 있다. 신당을 공식적으로 모실 수 없고, 신상을 걸어들 수도 없지만,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점을 봐주기도 한다. 점보기의 경우에서처럼, 절대자처럼 여겨지던 김일성의 사후에, 그리고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그동안 억눌렀던 기층적 무속 신앙이 다시 점차 솟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무속 의례의 절차나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기층적 차원의 종교성은 첩사리 없어지지 않으며, 나아가 남과 북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북한 종교문화의 심층, 북한 민간신앙 관련 연구는 이러한 유사성 내지 동질성을 확인시켜주는 일차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무속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민중적 종교이다. 한반도에서는 무, 무속 등의 언어로 약간 다른 양상 하에 지속되어 왔지만, 어떤 이름이든 인류의 가장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종교 현상인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단군’이 사실상 샤먼을 뜻하는 몽골어 ‘텐그리’에서 온 언어라는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 제정일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샤먼’, 즉 오늘의 ‘무당’은 한반도에서 정치 및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했다. 조선과 일제 강점기, 그리고 근대 산업화 시기에 남한에서도 전근대적 미신처럼 치부되고 억압받던 시절이 있었으나, 남한에서도 무당의 숫자는 줄기는 커녕 도리어 늘었다. 인간의 원초적 종교 현상을 외적 억압으로 없앨 수는 없다는 뜻이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역시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교육해왔고, 단군신화, 환웅이야기 등에 대해 배운다. 남북의 주민이 정서적으로 공유하는 지점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1992년 단군릉을 개건 확장하면서 민족적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은 향후 남과 북의 역사 교류를 용이하게 해줄 재료라고 할 수 있다. ‘단군’ 담론은 남과 북을 이어주는 역사와 종교의 접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의 통일은 제도적 통합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고 새로운 연대감이 창출될 수 있는 통일이어야 한다. 물론 모든 영역에서 같은 형태의 동질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은 영역별로 그리고 주체별로 상이한 속도, 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포함하면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한낱 한시에 이루어지는 제도적 통합이 아니라,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 구성원들 간 정서적, 이념적 공감대의 확보와 확장이다. 북한의 기층문화나 민속, 특히 민간신앙 연구는 남북 민중의 정서가 기층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무엇보다 민중의 자발성에 입각한 민간신앙의 영역은

‘남이나 북이나 비슷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초적 자료이다. 북한의 제도종교에 대한 연구는 종교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이미지만 부각시켜 남북간 이질성을 확인시켜주는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큰 데 비해, 북한의 민간신앙 연구는 남이나 북이나 민중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동질성의 확보에 공헌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신앙의 영역은 장구한 민족적 언어적 동질감이 단기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에 기여하는 동력이 되리라는 사실을 적절히 보여주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교차사례가 될 것이다.

5.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남북한 인구변화와 노동인력규모 전망: 남북경제교류확대의 효과에 대한 함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경제활동참가인구의 고령화를 수반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논의할 때 흔히 제기되는 지적은 남북한 통일 혹은 경제적 통합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미래를 전망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인구구조가 상이한 남한과 북한의 노동시장이 실질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남한이 경험하고 있는 인구고령화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남한과 북한의 현재 연령별 인구구조와 장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에 근거해서 남북한 통합이 남한의 인구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실질적인 노동투입의 규모는 연령별 인구규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령별 취업률(혹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연령별 취업인구의 생산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혹은 경제통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노동공급의 양상과 생산성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성별·연령별 취업인구가 장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이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전망하였다. 그리고 단편적인 질적 증거들을 토대로 남북한 노동인력의 생산성 차이를 살펴보고 이것이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효과에 대해 갖는 함의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들에 기초하여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이 남한이 인구고령화로 인해 경험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노동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지를 판단하고 향후 대북 경제협업의 내용과 전략에 대해 갖는 함의를 생각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한에서는 장차 인구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노동투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성별·연령별 노동공급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 경제활동인구나 취업인구는 2050년까지 현재 수준의 약 85%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고령화와 함께 노동인력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어나면서 생산성을 함께 고려한 노동투입 규모는 경제활동인구나 취업인구보다는 더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의 인구는 2055년까지 약 100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늘어나는 전체인구와는 상반되게 취업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 고령인구의 고용률이 낮아서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인력규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한편 북한의 취업인구의 규모의 감소속도와 취업인구의 고령화의 속도는 모두 남한에 비해서는 느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북한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통합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남한의 잠재적인 노동인력감소를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노동인력의 질적인 면을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노동이 남한의 노동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영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심각한 영양결핍을 경험한 북한주민들의 건강과 인지능력은 남한주민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북한주민의 건강, 신체적 능력, 인지능력 등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력의 질적인 면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현재의 북한 노동인력이 남한 노동인력을 효과적으로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의 효과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남한 노동수급사정의 시간적인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노동인력이 몇 년 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향후 약 20여 년 동안은 이로 인한 인력부족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의 경우처럼 여성 및 장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 인구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총량적인 노동인력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대로 결혼과 출산이 감소한다면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가 전망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출생아 수가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출생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 되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인력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한다면 북한의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인구가 남한경제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점은 가까운 장래가 아니라 약 20년 이후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는 남북 간 경제협력과 북한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가까운 장래에는 북한의 인력을 대규모로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과거 개성공단의 사례와 같이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소수의 선택적인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은 괜찮겠지만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사업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추측은 평균적인 북한주민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과 북한 내 인구의 지리적인 이동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둘째, 북한과의 협력 및 북한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미래세대의 건강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나 남한에 대해서나 장기적인 편익이 매우 높은 방안이라고 평가된다. 건강과 인적자본 발달은 경제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들의 개도국 지원에서 보건과 교육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또한 향후 20년 후에 북한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세대의 건강과 인적자본이 개선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남한의 청년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6. 정공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해방 후 북한에서 식민지법제의 청산과 체제 관련 법제 정비 -1945.8~1948.9-

1. 연구목표

- 북한 사회와 정책의 변화와 법제 변천의 통시적 연구
 - = 법과 사회의 관점에서 법제의 변천 검토
 - = 법은 구조이며, 사건이다. 정책의 거시적 관점과 사건의 미시적 접근 병행
- 해방 후 북한정권 수립기까지(1945. 8~1948. 9) 법제 형성 과정 분석

2. 연구진행 상황

- 기존 연구성과 정리 및 북한현대사 이해
 - = 역사학 및 사회과학 분야 연구성과 검토
 - = 법학 연구성과 검토
 -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북한 사회의 발전에 따른 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
- 기존의 자료 활용한 법령 목록 정리 및 주제별 분류
 - = 504건의 법령 목록 작성
 - 공포일, 명칭, 형식, 출전 등
 - 시기별 공포건수 분석
 - = 법령 주제별 정리
 - ①법제의 형식과 체계[주권자 및 법령의 위상 등]
 - ②식민지 법제 청산: 민족차별, 정치활동 제약 등
 - ③인민민주주의 법제 정비: 헌법, 참정권, 인민위원회, 인민회의, 당, 주민동원 등
 - ④사회주의 법제 정비: 토지법, 거래법, 가족관계, 노동관계, 조세, 재정 등
 - ⑤질서유지: 사법제도, 경찰, 형사법 등
 - ⑥사회유지: 식량, 산업, 위생, 보건, 교육 등

3. 향후 연구추진 계획

- 2020년 3월: 법령 정리 보완 및 주제별 분류 완성
 - = 현재의 법령 분류는 대한민국에 따르고 있음
 - 연구주제에 입각하여 주제별로 재분류함
 -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형성과 법의 역할에 중점
 - 특히 식민지 법제 청산에 주목하여 남북한 비교

- 2020년 4월: 입법형식 정리, 공포일 미상 법령 정리
- 2020년 5월: 논문 완성 및 투고
- 2020년 6월: 학술지 게재(서울대학교 법학, 인권과 정의 등)

4. 연구 성과 관련 정보

2019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발표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13:30~15:30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

세션13: 북한사회문화 발표3

제목: 해방 후 북한에서 식민지법제의 청산과 체제 관련 법제 정비
-1945.8~1948.9-

7. 정향진 (서울대 인류학과)

북한 조직생활 의례와 사회적 장의 정치화

※현재 아래 제목의 논문을 인류학 전문학술지에 투고한 상태임. 논문의 개요를 여기에서 제시하고 논문 전체는 첨부함.

●개요: 북한의 “사회” 혹은 사회적 장은 어떻게 구성되고 정치 체제와는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연관되어 있는가? 북 주민들이 생애와 생활의 (거의) 모든 국면에서 “정치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관계적 세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화되는가? 이 글을 이끄는 근본적인 의문이다. 현지조사가 불가능하고 체제의 특수성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상상을 압도해 온 사이 주민들의 경험적 현실로서 북한 사회, 특히 주민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장의 관계적·정의적(情意的) 성격에 대해서는 축적된 지식이 태부족이다.

북한을 아는 데 있어 지도자 및 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가 핵심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통치론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김정일 1998[1987])에서 수령을 국가사회의 “뇌수”로 규정할 뿐 아니라 그 규정은 강력한 1인 지도자 중심의 원칙으로 국가의 운영에서 관철되고 있다. 지도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조직과 연행, 그 이념적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논제가 가족국가(강진웅 2018; 이문웅 1982; Lee 1976), 유격대 국가(와다 2002), 수령교 신정체제(김병로 2000), 극장국가(권현익·정병호 2013) 등이 잇달아 제시되어 왔다. 이들 논제들은 공통적으로 지도자와 인민의 수직 관계축에 초점을 맞추어서 북한 국가의 성격을 설명하는 한편 인민들 간의 관계 역시 해당 논제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말하자면, 인민들은 가족국가의 자녀, 유격대 국가의 유격대원, 수령교의 신도, 극장국가의 관중 등으로 전제되었고, 인민들 간 관계의 성격은 지도자-인민의 관계에 종속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 그밖에 북한 체제에 대한 연구 일반에서도 인민들 간의 관계축에서는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연원으로 정치사회적 자장(磁場)이 형성된다는 가정(커밍스 2003: 576-600; Ryang 2012: 40-84) 외에 국가를 받치고 있는 수평 관계축이 어떠한 문화적 논리로 형성되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직 관계축에 상응하는 이론화 시도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북한의 사회적 장, 즉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적 세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북한 특유의 조직생활 의례인 생활총화를 그 통로로 삼는다. 북한 체제가 사회의 기층에까지 파고드는 당 및 대중 단체의 조직을 통하여 주민들을 동원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국토통일원 1982;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2004; 이종석 1988, 1995). 집단주의라는 명목으로 사회 전반이 그 구성과 작동에서, 그리하여 일상생활이 철저하게 조직화, 정치화되어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인민학교 2학년 때 입단하는 소년단을 시작으로 누구 할 것 없이 조직에 속하여 “조직생활”을 하게 되는 바, 조직생활은 곧 생활의 조직이라고 할 정도로 조직은 생활세계와 겹친다(이은숙·이인정 2010; 차승주 2010, 2011). 조직생활은 그 형태에서 사상학습(강연회, 학습회, 독보 등), 분공(조직에서 개인에게 맡기는 임무) 수행, 그리고 생활총화로 나누어진다(김종수 2008: 20). 이 중에서 생활총화는 북 주민들에게 조직생활의 대표로 간주되는 바, 다른 형태의 조직생활보다도 제의적 성격이 더 분명하다. 이름이 암시하는 대로, 생활총화는 체제의 목적을 위해 생활세계를 정치의례의 틀 속으로 들여온 경우다. 나는 생활총화가 북한에서 사

회적 장이 정치화되는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점에서 국가사회로서 북한의 제유(提喻)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생활총화는 생활세계의 관계적, 정의적 차원을 핵심자원으로 삼는 정치의 레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를 통해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관계적 세계를 추론해볼 수 있다.

이 글의 논의는 원거리 연구(culture at a distance)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정치화된) 사회적 장의 관계적·정의적 특징, 그리고 사회적 장이 체제의 목적을 위해 징발되는 방식에 대한 이론적 추정이다. 활용한 자료는 탈북민 구술자료와 북한 문헌자료로 나누어진다. 우선, 2017~2019년 사이에 탈북민 총 12명을 대상으로 북한 생활문화의 다양한 국면에 대해 행한 면담에서 사회적 장에 대한 직, 간접적인 자료를 얻었다. 그 외 기존 연구에서 인용한 면담자료 및 탈북민 구술자료집(김석향 2018; 김종군·정진아 2012)을 참고하였다. 북한 문헌자료는 노동신문, 각종 잡지, 사전류, 교과서 등에서 조직생활 및 생활총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였다. 생활총화에 대한 언론보도 및 탈북민들이 생활총화에 대해 만든 영상물들 역시 자료로 활용하였다(대표적으로, NK 지식인연대 2012; Radio Free Asia 2015). 그리고 분단 이전 시점까지의 사회사적 연구, 1970년대 경까지의 남한의 촌락 사회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그리고 북한에 대한 기존 저작들의 민족지적 통찰에 근거하여 추정작업을 하였다. 다음 절에서 먼저 북한 주민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사회적 장에 대한 나의 관심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후 의례로서 생활총화의 의사소통적 특징, 공동체 모델의 근대적 변용과 생활총화, 사회적 장의 정치화와 의례 효능, 그 긴장 등을 차례로 살펴본다.

●인용문헌

- 강진웅. 2018. 『주체의 나라 북한: 북한의 국가 권력과 주민들의 삶』. 서울: 오월의봄.
- 국토통일원. 1982. 『조선로동당 주요 외관단체의 조직 및 활동』. 국토통일원.
- 권현익·정병호. 2013.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파주: 창비.
- 김병로. 2000.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 김석향. 2018.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북녘 땅 고향 이야기』. 서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 김정일. 1998[1986].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432-47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종군, 정진아 편. 2012. 『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 서울: 박이정.
- 김종수. 2008. 북한의 ‘생애주기’적 조직생활 변화와 내구력 평가. 『인문사회과학연구』 21: 5-37.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편. 2004.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 서울: 한울.
- 와다 하루키. 2002.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서동만·남기정 옮김. 서울: 돌베개.
- 이문웅. 1982. 북한의 사회 문화적 변동: 사회 조직 및 신앙 체계를 중심으로. 한상복 편. 『한국인과 한국문화: 인류학적 접근』. 서울: 심설당.
- 이온숙·이인정. 2010.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조선민주녀성동맹: 사회변동과 체제유지의 기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종석 편. 1988.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 세종연구소.
- 이종석. 1995.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차승주. 2010. “북한 조선소년단의 사회통합적 기능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연구』 7(1): 64-73

- 차승주. 2011.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사회통합적 기능에 관한 연구.” *글로벌정치연구* 4(1): 49-85.
- 커밍스, 브루스. 2003.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김동노, 이교선, 이진준, 한기욱 옮김. 파주: 창비.
- Lee, Mun-woong. 1976. “Rural North Korea under Communism: A Study of Sociocultural Change.” *Rice University Studies* 62(1): Whole Issue. Houston, TX: Rice University.
- NK 지식인연대. 2012. 북한주민실상 재연 ‘생활총화.’ (2020년 1월 28일 접속)
<https://www.youtube.com/watch?v=wKdOqQSNnsc>
- Radio Free Asia. 2015. 북 생활총화 수첩 내용 들여다보니. 2015년 4월 13일자. (2020년 1월 3일 접속)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adio-world/radioworld-04132015134544.html
- Ryang, Sonia. 2012. *Reading North Korea: An Ethnological Inquiry*. Cambridge, MA: Th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8. 채수홍 (서울대 인류학과)

베트남 개혁개방정책과 노동시장이 북한사회에 주는 교훈

1. 연구계획과 결과요약

최근 개혁개방을 향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선례로 “베트남의 길”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북한이 구소련이나 중국보다는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과 유사한 모델을 차용하여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Doi Moi, 쇄신)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나왔으며 중국, 구소련, 동유럽 등 다른 지역의 탈사회주의 국가와 어떻게 다른 정치경제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이해 없이 제기되고 있는 듯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자는 원래 계획했던 연구주제를 좁혀 ‘베트남 개혁개방정책과 노동시장이 북한사회에 주는 교훈’이라는 논문초고를 작성하고 이를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수정 중이다(첨부 논문참조). 2019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에 걸친 현지연구의 결과물인 이 논문초고는 베트남의 개혁개방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노동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 보고서의 연구주제인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개혁개방의 역사와 각 시기별 노동시장의 변화양상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분석하여 북한의 사례를 위한 교훈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현재까지 작성한 논문초고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서론

2. 개혁개방정책의 배경, 추진과정, 특징

1) 개혁의 배경과 전개과정

- (1) 생산양식과 생산성의 문제
- (2) 사회주의개혁 실패의 인정과 도이머이

2) 개방의 가속화와 세계경제로의 통합

3. 개혁개방의 성과와 노동시장의 변화

- 1) 도이머이 직전과 직후의 노동시장
- 2) 개혁개방정책의 안착과 노동시장 활성화
- 3) 산업구조와 이주노동 패턴 변화
- 4) 개혁개방정책의 평가와 노동시장의 향후 변화

4. 사회경제적 분화와 노동시장의 정치적 안정

- 1) 사회경제적 분화와 노동자가구의 재생산
- 2) 당-정부와 노동조합의 대응
 - (1) 당-정부의 노동자 복지정책
 - (2) 노동법과 노동조합

3) 베트남의 저항정치와 노동자 파업

5. 결론: 북한의 개혁개방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시사점

이 논문초고는 베트남의 개혁개방 역사와 노동시장의 변화는 북한을 연구할 때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베트남의 사례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실행할 때 노동시장의 어떤 부분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려하였다. 그 결과 필자가 잠정적으로 도출한 교훈은 아래와 같다.

첫째,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체제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종의 ‘생계윤리(subsistence ethics)’ (Scott 1976)라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인민의 생계수준을 계층별로 어떻게 악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같은 맥락에서, 둘째, 시장경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개혁개방정책이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흔들 것이라는 자유주의 학자들의 기대는 베트남의 사례와 맞지 않는다. 북한의 개방정책 그리고 시장경제의 도입과 확산이 정치적 안정성을 흔들고 나아가 체제를 전환시킬 것이라는 가정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제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혁개방이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북한정권의 우려도, 오랜 교육과 일상을 통해 북한민인이 내면화한 지배문화를 무시하고 개혁개방과 통일을 동일시하는 외부의 시각도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개혁개방 직전과 직후 베트남 정부가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민간영역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도입을 논의할 때도 국영부문과 사영부문 또는 공식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비중과 성격에 대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 확보와 타당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베트남의 사례는 노동시장의 자유와 유연성(flexibility)을 좌우하는데 거주이전의 자유와 이주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추정엔 향후 북한사회의 거주관련 법과 이주패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베트남의 사례는 인구의 동학 특히 출산율과 고령화가 향후 외국자본을 유인하고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 노동시장에 대한 인구학적 변화추이에 보다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섯째, 베트남의 사례는 북한사회의 문화적 욕구가 어느 사회 못지않게 노동시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사회가 경제적 욕망보다 이념과 문화적 관념을 강조해온 역사를 고려할 때 일자리와 가족 및 공동체의 재생산이 어떻게 연계되어 노동시장의 특성을 만들어갈 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베트남의 사례는 외자의존도를 어느 정도 통제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전면적인 시장경제에의 도입과 노동시장의 개방의 속도가 조절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여덟째, 국가와 노동조합 혹은 다른 제도적 장치가 노동시장의 안정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베트남의 사례는 시장경제의 정착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분화가 심화되면 노동시장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다년에 걸친 이 연구는 베트남 개혁개방의 역사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성찰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향후 어떠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2019년 연구를 토대로 북한과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북한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회경제적 분화와 문화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심도 있게 예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활동 및 성과

1) 논문 게재

가. 현재 ‘베트남 개혁개방정책과 노동시장이 북한사회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논문초고(첨부 참조)를 완성하여 향후 관련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임.

나. 이 연구와 연계하여 삼성경제연구소의 요청으로 ‘베트남 사회환경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음.

2) 학술대회 발표

가. 11th 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 Scholars (ICAS), 2019년 7월 17일. 2019년 7월 16일~19일 (Netherlands, Leiden University)에서 ‘Korean Peninsula on the Move’라는 세션을 조직하고 사회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co-organizers: Korea Foundation,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나. 2019년 11월 26일~27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통일기반구축연합학술대회에서 ‘세션13: 북한사회문화’의 사회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베트남 개혁개방정책과 노동시장의 실태’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음.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이 사업은 기획의도에 맞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북한연구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평가됨. 각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이 통일평화연구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여 새로운 시각, 이론, 주제, 연구방법을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이러한 성과는 계획단계에서 연구의지를 가진 서울대 교내 연구자를 조사하여 섭외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하였음.

○ 사업의 효율성

: 이 사업은 세 가지 효과를 거두었음. 첫째, 평화통일 연구에서 새로운 전문성을 지닌 연구자를 육성하는 효과를 내고 있음. 둘째, 새로운 시각, 분석방법, 함의를 보여주는 논문을 발표하여 평화통일 분야의 시야 확대에 공헌하였음. 셋째, 여러 학문의 개별 연구자가 북한과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다학제간 교류를 하는 경험을 축적하였음.

: 이 사업은 기존의 사업과 달리 ‘따로 또 같이’ 방식의 연구를 지향하였으며 이로 인한 장점과 단점이 모두 노정되었음. 하지만 이 사업의 효과는 단지 일반적인 연구사업의 효율성의 척도로 평가하기 어려운 성과를 만들어내었음.

○ 사업의 영향력

: 이 사업은 향후 서울대는 물론이고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북한과 통일평화 연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선례를 남기고 있음. 각 학문분야에서 통일평화연구에 대한 논의와 시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의 연구진이 향후 본인의 연구를 여러 계기를 통하여 발표함으로써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통일평화에 대한 신선한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업의 발전가능성

: 이 사업은 3차년도에 주제를 더욱 좁혀 연구지원기관에 개별/공동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임. 이를 통하여 교내연구과제를 외부의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선례를 남기고 개별 연구자의 연구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정착시킬 것으로 예상함.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이 연구가 개별연구자가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여 각자 연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전체 연구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또한 ‘사회문화분야’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지만 더욱 주제를 좁혀 개별연구가 공동연구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지닐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미흡하여 아쉬움으로 남았음.
- 향후 개별연구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전체 연구진의 공동논의가 활성화되고 연구의 초점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보임.

□ 향후 계획

- 본 연구의 성과는 향후 학술지나 저서에 게재하여 발표할 것임
- 본 연구 사업의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탈사회주의 및 북한의 사회문화와 관련한 강의/강연을 통해 학내외와 공유할 것임
- 향후 연구결과를 통대로 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관련한 정책자문에 적극 참여할 것임
- 이 연구의 초점을 사회문화분야에 보다 적합한 연구자를 중심으로 다시 조직하고 향후 이 사업의 지원이 없어도 연구가 지속가능하도록 연구프로젝트를 신청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임.

□ 건의사항

- 예산 항목간의 비율이 제한되어 연구의 진행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면 좋겠음.